

트럼프 재선 성공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December 19,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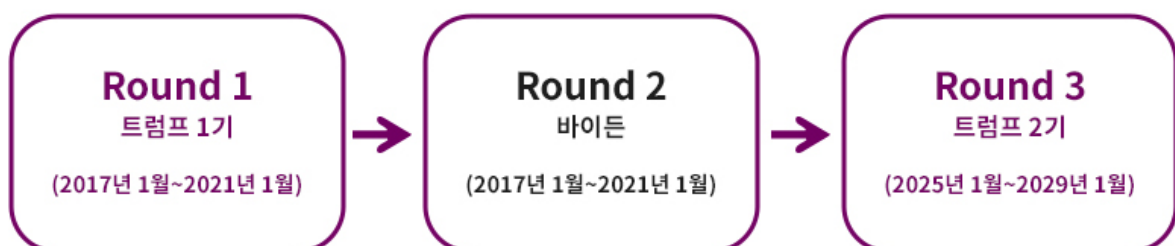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외 파급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기회 요인에 대한 기대와 위험 요인에 대한 긴장 속에서 트럼프 2기 新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전략 방향 및 정권인수팀과의 협상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강화 및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등 ‘극단적 단절’을 감수한 미국의 對中 공세 수위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응 전략 수립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에서 취했던 대중국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대중국 전략 점검

1. ‘Round 1 ~ Round 2’ 복기(復棋)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2025년 1월까지 이어질 바이든 행정부 기간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노선 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Round 1’, 바이든 행정부 ‘Round 2’로,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Round 3’으로 구분하여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Round 1 ~ Round 2’ 시기의 對中 강경 노선 정책의 공통된 인식의 출발점은 안보와 기술 경쟁 이슈이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수행 전략은 경제, 기술, 외교, 안보, 사회 각 분야별로 차이점을 보여 왔습니다.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대중국 압박 전략을 보여 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주요 무기로 활용하여, 경제적 압박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복원과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추월을 따돌리기 위한 다자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맹국/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통해 ‘규제 및 규범의 강조’를 다자 협상의 주력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정책 접근과 실행 전략의 차이점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맞춤형 제재 조치까지 취해 왔습니다.

구분	트럼프 정부 1기 (2017년 1월~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2021년 1월~2025년 1월)
	Round 1	Round 2
경제적 측면	✓ 무역 전쟁, 관세 부과: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 ■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 ■ 미국산 농산물 의존 감소: 미국산 대두 수입량 감소에 대응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농산물 거래 확대 ■ 내수 경제 강화: "내수 대순환(国内大循环)" 정책. 외부수요 의존도 축소, 국내 소비 확대	✓ 기술 제재와 공급망 재편: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희토류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통해 중국의 기술 접근 제한 ■ 반도체 자급화 가속: 중국은 SMIC(중국반도체제조)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촉진 ■ RCEP 및 BRI 활용: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BRI(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 一帶一路) 이니셔티브 통해 대체 시장 및 공급망 구축
기술적 측면	✓ 화웨이 제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5G/통신 기술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 제한 ■ 자체 운영체제 개발: 미국 SW 의존도 감소를 위해 화웨이 HarmonyOS 개발, 생태계 확장 ■ 반도체 독립 노력: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에 주력하며 자급률 향상	✓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AI 기술, 양자컴퓨팅 등 수출 차단 ■ AI 및 양자 기술 투자 확대: 중국은 국가 차원 AI, 양자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대 ■ 반도체 제조 자급률 상승: 2023년 SMIC는 7nm 공정 기술을 도입, 글로벌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
외교적 측면	✓ 미중 무역갈등 심화, 동맹국과의 동맹강화: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 강화, 중국의 국제적 고립 시도 ■ 일대일로(一帶一路), RCEP 활용: ASEAN,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협력 확대 ■ '남남 협력' 확대: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경제, 외교협력 강화, 미국의 고립 전략에 대응	✓ 동맹기반 접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 ■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 중국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원 개발을 통해 영향력 확대 ■ 유럽과 경제협력 강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협력 지속
안보적 측면	✓ 대만 문제 부각: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대만과 관계 강화. 중국의 민감성 자극 ■ 군사력 강화: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 확대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 ■ 해군력 증강: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 강화 및 해군력 대폭 확장	✓ 대만 지원 지속: 대만과 협력 지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강화 ■ 중국군 현대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우주 군사력 증강, 항공모함 건조 등 현대화 ■ 러시아와 협력 강화: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 훈련 및 안보 협력 확대, 미국 견제 대응
사회적 측면	✓ 인권 문제 부각: 두 정부는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화 ■ 국가주의, 애국주의 강화: 중국은 국내 애국주의 캠페인 강화, 대외 비판 관련 국민적 결속 도모 ■ 정보 통제, 검열 확대: 중국은 소셜 미디어와 언론 통제 확대, 외부 비판에 대한 내성 강화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 부분은 해당 美정부의 대중국 공세, ■부분은 중국의 대응 전략

그러나, ‘Round 1’ 시기, 결과적으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상장기업 기준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매출 비중이 2017년 총 매출의 5.7%에서 2024년 3.7%로 약 2% pt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및 경제 성장을 하락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품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Round 1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및 중국의 대응 조치
2018-03-22	■ 대중국 600억 달러 관세 부과 발표. 4월 3일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 부과 공식화
2018-04-04	■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대두, 자동차, 화학 제품을 포함한 106개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세율로 관세 부과 제안
2018-05-17	■ 국무원 부총리 류허(刘鹤)는 워싱턴에 방문에서 관세 부과 관련 논의 ■ 5월 19일, 미-중은 워싱턴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 농산물, 첨단기술 제품, 금융 등 분야에서 무역 협력 강화 발표
2018-05-29	■ 미국은 중국의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再 제안 및 목록 발표
2018-06-16	■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대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결정 발표
2018-08-23	■ 미국은 8월 23일부터 약 16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중국은 이에 대응해 16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 결정(미국 측과 동시 시행)
2018-09-24	■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 부과
2018-11-15	■ 미국 상무부는 11월 1일 양국 국가원수 통화 후, 양측의 경제무역 분야 고위급 접촉이 회복됐으며 업무팀은 양국 국가원수 간 통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표
2018-12-01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이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 후 양국 국가원수는 신규 추가 관세 부과 중단 합의 발표
2018-12-14	■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
2019-02-15	■ 미-중은 5차례(2019년 2월 15일~2019년 5월 1일) 고위급 경제 무역 협상 연속 진행
2019-05-06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던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5월 10일부터 25%까지 추가 관세 부과하고, 3,250억 달러 규모 제품의 추가 관세를 25%까지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
2019-05-13	■ 중국은 6월 1일부터 미국에 5% 및 10% 관세를 부과한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10%, 20% 및 25%로 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
2019-08-15	■ 미국은 9월 1일과 12월 15일, 3,000억 달러 중국 제품에 10% 관세 부과 발표
2019-08-23	■ 중국은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5%, 10%의 관세를 부과 발표
2019-09-12	■ 트럼프는 2,500억 달러의 상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10월 15일로 연기
2019-10-11 2019-12-13	■ 미-중 경제무역팀은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 ■ 미국은 10월 15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 ■ 중국과 미국이 1단계 경제 무역 협정문에 합의하면서 무역 마찰 완화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노란색 음영 부분은 美 정부 해당 관세 공세에 대한 대중국의 대응 조치

미국의 강경한 관세 압박 정책 속에서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와 더불어 반도체 밸류 체인의 독립성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전 기술 자급 레벨’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습니다.

Round 1 시기의 반도체 굴기에 이어, Round 2 시기에 중국은 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내외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12월,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와 같은 외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주력 분야에 대한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주력 IT 기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Temu, AliExpress, BYD, Pony Ai 등 중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구현된 기술을 전-후방 산업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포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추후 2025년 1월에 진행될 고객 세미나 강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 추가 설명 예정)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		시기	세부내용
Round 1	<중국제조 2025>	2015-05	■ 반도체 굴기(屈起)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	2014-09 2019-10 2024-05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소득세 정책	2019-05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	2020-07	
	'14차 5개년 계획', 2035년 비전/목표 건의	2020-11	
	과학 기술 자립 자강 전략	2020-11	
	칩 자금률 목표	2020-11	
Round 2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2021-12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집적회로 설계, 생산, 패키징 테스트, 장비 및 재료 기업은 현재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의 15% 공제 가능 ■ 8월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실시 발표 ■ 라이다, 드론, 바이오 기술 제품을 포함하여 군사 및 민간 기술의 수출 제한 발표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2022-01	
	집적회로 기업 부가가치세액공제 정책	2023-05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한	2023-07	
	선진 기술 수출 제한	2023-12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2. 중국의 내성 강화

1) 트럼프 2기 對中 공세 확대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책(對策) 점검

‘글로벌 공장’ 역할을 담당하던 중국이 갑작스러운 격변기를 겪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제조업 중심 산업전략 재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시장에서의 압박, 기술거래 차단, 투자 장벽 강화, 자금 조달 채널 차단 등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통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제재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와 더불어, 팬데믹에 따른 탈중국 가속화는 이러한 미국 중심의 제재에 연료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으로서는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과 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낸 지금의 중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불거질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취웨이시(曲維璽) 부원장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펼칠 향후 강경책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취웨이시(曲維璽) 부원장	
주요 이력	인터뷰 내용
■ 1987-1999 대외경제무역학부교육국/ 인사교육사 근무 ■ 1994-1996 엔타이(烟台)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겸임 ■ 1999-2005 신화사(新华社)홍콩지사 경제부/ 중앙인민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 경제부 ■ 2005-2010 상무부인사사(人事司) 및 연구실 ■ 2010-2016 상무부 심천(深圳)특파원 사무소 부특파원(부사급) 역임 ■ 2016-현재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 역임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대응해 반격할 것”,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관세를 인상한다면 손해를 보는 건 미국 국민”이라며 “미국 연구기관도 중산층과 빈곤층 피해가 커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선거 중 국민에게 한 약속이 정부 출범 이후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다” ✓ 중국 정부가 전기차·스마트폰 핵심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환경 규제·보호 때문에 계획적으로 채광한 것”, “희토류는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데,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며 “희토류를 무기화한다고 해서 중국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 관행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에 생산 과잉은 없다”, “과거 독일이나 일본이 내연기관차를 외국에 판매할 때 일본은 50%, 독일은 80%를 수출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80%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생산량 과잉이 아니냐”고 반문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2024년 11월 25일 기자 간담회 언론 자료(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

그럼 이렇게 중국이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국의 RCEP 활용 전략 확대 가능성

지난 2023년 11월, 트럼프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IPEF를 ‘1TPP2’로 지칭하며, 해당 협정의 폐기를 공언하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향후 미국 주도의 IPEF는 트럼프 2기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PEF와 TPP는 설계 측면에서 구조와 목표가 다르며, IPEF는 관세 자유화가 아닌 현대적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 자극 및 다자간 무역협정 재검토 관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폐기 또는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각 참여국들은 경제적 실리를 위해 RCEP와 IPEF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협정간 갈등의 최소화 및 기술 상호 협력을 기대하였으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한 축인 IPEF가 약화될 경우, 새로운 전략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주도 협정이 국가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신뢰 측면에서의 피로감이 여타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RCEP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현재 RCEP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15개 참여국 간의 현저한 경제 격차로 인해 참여국 간 협력 속도에서 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른 참여국들에 비해 경제 개방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미-중 분쟁에서 미-중 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 주도의 RCEP가 제시하는 당근책과 규제 강도에 따라 향후 관여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결합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CEP 가입국 주요 지역	IPEF 가입국 주요 지역
참여국 총 15개국(ASEAN 10개국 포함)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주요협상과 지문대상 주요국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대륙,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언론 자료 활용

1 TPP는 2016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견제 및 미국 중심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체결한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에서 취임 즉시 탈퇴한 사례로 인해 많이 희화화되었습니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구분	설명
개요	■ 출범 시기: 2020년 11월 15일 체결, 2022년 1월 1일 발효 ■ 참여국: -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비ASEAN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총 규모: - GDP: 약 25.8조 달러(2022년 기준, 세계 GDP의 약 30%) - 인구: 약 23억 명(세계 인구의 약 30%) - 무역량: 세계 무역의 약 27%
목표/특징	■ 주요 목표: - 무역 자유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 확대 - 공급망 강화: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경제 협력 증진: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협력 확대 - 균형 성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격차 해소 ■ 주요 특징: - 다층적 경제 협력: ASEAN 중심 비ASEAN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제고. 다양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호 이익 창출 - 포괄적 협정: 상품/서비스/투자 및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기존 FTA 간소화: 참여국들 간 이미 체결된 개별 FTA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 관세 인하: - 90% 이상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협정 발효 이후 약 20년간 점진적 관세 철폐 - 중국-일본 간 최초의 FTA: RCEP를 통해 일본과 중국 간 관세 혜택 적용 ■ 서비스 무역: - 서비스 산업(금융, 의료, 교육 등)에서의 시장 개방 - 한국과 일본은 RCEP 발효 후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접근 기회 ■ 투자 보호: 회원국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투자 보호 조치 강화 ■ 원산지 규정 단일화: 생산 공정에 여러 회원국이 참여해도 단일 원산지 규정 적용 관세 혜택 (ex: 부품이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도 단일 규정 간소화 관세 적용 가능)
경제적 효과	■ 참여국에 대한 기대 효과: - 경제 성장 촉진: RCEP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0.2%에서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무역 및 투자 확대: 회원국 간 무역량이 약 10% 이상 증가 - 공급망 안정화: COVID-19 이후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 해결 ■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중심 이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부상 - 미국 영향력 감소: 미국 미참여로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도전 과제	■ 경제적 불균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격차로 협정 이행 속도 상이 가능성 ■ 비회원국과의 관계: RCEP는 미국과 인도를 포함하지 않음. 이는 협정의 포괄성을 제한하고, 경제 블록화 심화 가능성 상존 ■ 환경과 노동 문제: 환경 보호와 노동권 강화와 같은 현대적 기준 미흡하다는 비판
주요국 전략	■ 중국: - RCEP를 통해 ASEAN 및 일본,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 견제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 지속 ■ 한국: 아세안 시장 확대와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RCEP 활용 ■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무역 확대와 동시에 아세안 내 경제적 영향력 유지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체제입니다. 선언적 협정 성격을 가진 IPEF 대비, RCEP는 중국 주도의 무역 자유화, 경제 협력,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RCEP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참여국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니셔티브의 추가 제공과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앞서 언급한 참여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이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에서 국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RCEP 참여국 사례-1 : 인도네시아 주요 국가 핵심 사업

중국 기업 참여 현황	분야
China Road & Bridge Corporation(中国路桥工程有限责任公司), 인도네시아 사마랑-데마크 유료 공로 프로젝트	교통
China RAILWAY 20 BUREAU Group Corporation(中铁二十局集团有限公司), 소로-냐쿠론 유료 고속도로 1-2구간 및 2-1구간 하도급 계약	교통
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中国土木工程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화물 철도 프로젝트	교통
China Road & Bridge Corporation(中国路桥工程有限责任公司), 인도네시아 반둥 고속도로 3기 프로젝트	교통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 인도네시아 라보타항구 부설 부두 공사	교통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교통
Harcan Engineering Co., Ltd.(和建国际工程有限公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중앙병원 EFC 협정	건설
China State Construction Engrg. Corp.(中国建筑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발리 섬 전시센터 신규 계약	건설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imited(中国交通建设股份有限公司), 인도네시아 자야푸라 임업 공사	건설
China State Construction Engrg. Corp.(中国建筑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고급 아파트 건설 계약	건설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인도네시아 PENTA 800만t 홍토 니켈광 채굴 및 운송을 도급 받아 EPC 프로젝트	광산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인도네시아 BSP 홍토 니켈광 도급 받아 EPC 프로젝트	광산
MCC International Incorporation Ltd.(中冶国际工程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REEF 페로니켈 제련 프로젝트 계약	광산
The Seventh Metallurgical Construction Group Co.,Ltd.(七冶建设有限责任公司), 인도네시아 오만 구리 제련 프로젝트 신규 계약	광산
MCC (Shanghai) Steel Structure Technology Corp.,Ltd.(中冶(上海)钢结构科技有限公司), 인도네시아 모디카 청산 AIM 제조 프로젝트 신규 계약	광산

China Sixth Metallurgical Construction Co., Ltd.(中国有色金属工业第六冶金建设有限公司, 인도네시아 OBI 니켈 코발트 습식 3기 프로젝트 신규 계약	광산
China Construction Third BUREAU Third 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中建三局第三建设工程有限责任公司), 인도네시아 OBI 니켈광 개발 프로젝트 신규 계약	광산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s Group Corporation(中国建材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금광 시공 종합 도급 프로젝트 신규 계약	광산
MCC International Incorporation Ltd.(中冶国际工程集团有限公司), 인도네시아 OBI 페로니켈 프로젝트 증량 보충 신규 계약	광산

주: 중국대외경제부서상회, 중국일대일로망.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 RCEP 참여국 사례-2 : 말레이시아 주요 국가 핵심 사업

중국 기업 참여 현황	분야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말레이시아 Pahang Pekam 1200MW 가스연합순환발전공장 EPC 프로젝트 신규 계약	전력
ChangJiang Survey, Planning, Design and Research Co., Ltd.(长江勘测规划设计研究有限责任公司), 말레이시아Kelantan 84MW 수력발전 EPC 총 도급 프로젝트 신규 계약	전력
중국기업, 말레이시아kuching ART 전력 프로젝트	전력
CGGC INTERNATIONAL LTD.(中国能建葛洲坝集团), 말레이시아 Balaing 수력발전소 댐 매립 프로젝트	전력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말레이시아 Pahang 500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계약	전력
China Railway Engineering Group Limited(中国铁路工程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Kelantan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전력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中国电力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KIDURONG 공동순환가스발전소 프로젝트	전력
Tellhow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Ltd.(泰豪国际工程有限公司), 말레이시아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계약 체결	전력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연결선 신규 프로젝트 계약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하철 2호선 지하 3구간	교통
China Railway Group Limited(中国中铁股份有限公司), 말레이시아 Sarawak ARTR 약전 통합 프로젝트 신규 계약	교통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 말레이시아 SUKE CA4 고속도로 프로젝트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터널 '3통1진' 건설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6지부 11#특대교 공사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옥상 터널 굴진 작업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하철 2호선 1구간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18호 터널 관통 사업	교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11호 터널 관통 사업	교통

주: 중국대외청부공사상회, 중국일대일로망.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RCEP 참여국 사례-3 : 베트남 주요 국가 핵심 사업

중국 기업 참여 현황	분야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中国电力建设集团有限公司), 베트남 MK Huyện Kỳ Anh 해상 풍력 프로젝트 신규 계약	전력
Sungrow Renewables Development Co., Ltd.(阳光新能源开发股份有限公司), 닥농 풍력 발전 프로젝트 계약	전력
China Gezhouba Group Company Limited(中国葛洲坝集团股份有限公司), 베트남 까마우성 경해 풍전 프로젝트 신규 계약 체결	전력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베트남 남창 1A 수력발전 프로젝트 총 도급 계약	전력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베트남 닥락성 순풍 2호 200MW 풍력발전소 신규 계약	전력
중국기업 공동경영체(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 및 Powerchina International Group Limited(中国电建集团国际工程有限公司)로부터 구성), 베트남 짜빈성 동성 1기 80MW 해상 풍력 프로젝트	전력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中国电力建设集团有限公司), 베트남 카일론 까마우성 관광지역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전력
Orient International (Holding) Co., Ltd.(东方国际 (集团) 有限公司), 베트남 Truong Hai Group 3기 및 4기 근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계약	전력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中国能源建设股份有限公司), 베트남 대진 90MW 농광 상호보완 발전소 EPC프로젝트 계약	전력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中国机械设备工程股份有限公司), 베트남 평화 수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계약 체결	전력

주: 중국대외청부공사상회, 중국일대일로망.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중국 입장에서는 RCEP 참여국 간의 불균형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인 호주, 일본, 유럽 등에 대해서도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은 일대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 내 주요 지역과 거점 도시의 향후 역할 변화 및 재정립 기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비즈니스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던 주요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기존 역할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① **동부 연안 지역:** 기존의 단순한 경제 중심지 역할에서 일대일로의 글로벌 거점으로 전환. 특히, 상해와 심천, 홍콩은 국제 금융과 기술 협력 허브 역할 강화
- ② **중서부 내륙 지역:** 서부 대개발 정책을 통한 균형 발전 전략 중심에서 일대일로 육상 루트의 주요 거점 역할 강화. 물류와 제조 중심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 및 물류 허브로 전환
- ③ **동북 지역:** 전통적인 중공업 중심지였으나, 쇠퇴 후 동북 진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과 현대화를 추진해 옴. 향후 동북 지역은 일대일로 북극 루트 및 러시아와의 협력 거점으로 재정립.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를 통한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 확대

궁극적으로 중국은 지난 8년 간 Round 1과 Round 2 시기를 거치면서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가적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등 신기술 인프라 기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대일로 관련 중국 주요 지역과 거점 도시

구역	성(省)	특징 및 주요 내용	거점 도시(市)
서북	신장(新疆)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 지역 일대일로 교통 허브 건설, 우루무치에 아시아-유럽 경제협력 시범구 설립	우루무치(乌鲁木齐), 카스(喀什)
	칭하이(青海)	시닝 - 방콕, 서울, 타이페이 국제항공편 개통, 국제상업지구, 보세창고 등 설립	시닝(西宁), 하이둥(海东), 거얼무(格尔木)
	간쑤(甘肃)	란저우신구, 둔황국제문화관광도시, 중국실크로드 박람회	란저우(兰州), 바이인(白银), 주취안(酒泉), 자위관(嘉峪关), 둔황(敦煌)
	산시(陕西)	중앙아시아 국가 및 호주와 자원 탐사 협력 강화 국가항공도시시범구, 에너지거래센터 설립	시안(西安)
	닝샤(宁夏)	닝샤 내륙개방형 경제시범구 조성	인촨(银川)
	네이멍구(内蒙古)	북방 개방의 주요 통로 얼렌하오터 국가 중점개발 개방 시범구 설립, 후룬베이얼 중국 - 러시아 - 몽골 협력 선도구 발전 촉진	-
동북	헤이룽장(黑龙江)	동부연해에서 한국, 일본, 북미까지 국제 운수 체계 구축, 국제 통관 및 운수 간소화 추진	-
	지린(吉林)	단둥항은 대만반도 개방의 주요 통로, 통화시에 국제 내륙항 건설 추진	-
	랴오닝(辽宁)	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주요 거점, 다롄시는 '한국-중국-러시아 국제 물류 대통로 건설' 추진	-

내륙	충칭 (重庆)	청위경제구 심화 발전	-
서남	티베트 (西藏)	남아시아 지역과의 물류 연결성 강화 및 경제, 문화 교류 확대	-
	윈난 (云南)	주변국과의 국제 운송 루트, 동남아시아 국가의 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	-
	광시 (广西)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간 연결고리 베이부만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
동남	푸젠 (福建)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 지역 샤먼 동남국제해운센터 건설, 샤먼 신공항 건설 추진	샤먼(厦门),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상하이 (上海)	해외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해외 투자의 교두보	-
	광둥 (广东)	광저우항과 21개 항구, 해상항구연맹 조직, 아세안 국가와 항구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추진	광저우(广州)
	저장 (浙江)	닝보 - 저우산항 일체화 추진, 열해 항구 - 이우 국제내륙항 통합 건설 추진, 항구경제권 조성	닝보(宁波), 조우산(舟山)
	하이난 (海南)	남해 자원개발 서비스 기지, 해상 지원 기지 건설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노란색 음영 부분은 RCEP 주요 참여국과 연계되는 프로젝트

3) 중국의 GDI(Global Development Initiatives) 구현 전략

지난 2024년 11월 18일,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를 위한 8가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을 일대일로와 연결하여, 일대일로를 단순히 해상 및 육상 루트에서의 일대일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프로젝트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저성장 국가들에 대한 관세 철회 정책 제시 등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8대 행동 계획	주요 내용
✓ 일대일로 공동 건설	■ 새로 설립된 7,000억 위안의 자금 조달 창구와 800억 위안의 실크로드 펀드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더욱 구축하고, 녹색 실크로드(绿色丝绸之路)를 이끌고,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에 역량을 부여
✓ GDI 구현	■ 1,100개 이상의 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연구 센터 건설 ■ 200억 달러의 자금 창구를 계속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디지털 경제 및 기타 분야의 실용적인 협력 심화

✓ 아프리카 발전 지원	■ 지난 9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10대 파트너십 행동을 선언, 이를 위해 3,600억 위안의 자금 지원
✓ 빈곤 감소 및 식량 안보에 대한 국제 협력 지원	■ 중국은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합'에 가입, G20 발전 장관회의의 지속 개최 지지, 국제 식량 손실 감소 회의 계속 개최
✓ 과학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연합과 공동으로 개방된 과학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시작 ■ 세계 과학 기술 혁신의 결과가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
✓ 'Global South'에 도움되는 G20의 실질적 협력 역할	■ <개발도상국 청정 에너지 투자 증가 로드맵>, <바이오경제 고급별 원칙> 등의 성과를 활용 ■ 베이징에 위치한 G20 창업연구센터 업무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박물관 디지털화, ▲고서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실천	■ 개발도상국과 ▲장물 추적(追逃追赃), ▲부패 피난처 거부, ▲반부패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대외 개방 시스템 대폭 개선 및 저발전 국가에 대한 개방 확대	■ 중국은 이미 수교 중인 모든 극빈 저발전 국가의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선언 ■ 지금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중국의 누적 수입액은 8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주: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정리

II. 트럼프 2기, 미-중 사이에 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1. 'Round 3', 트럼프 2기에 맞선 중국의 예상 대응

중국 내 주요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동북아 新질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2개의 축에서 '미국 동조 정책(Follow US)'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남북 관계 개선을 배제할 경우,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줄 수 있는 유인 전략은 경제 발전 측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령, 향후 RCEP의 목표 중의 하나는 한-중간 무역 품목의 약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중-일간 RCEP 역시 첫 번째 FTA로서 양국간 경제 관계 재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세 철폐는 10년~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만으로는 중국이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노선에 대응하여 향후 4년 내에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국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중국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 유인 카드로는 다음 4가지가 예상됩니다.

1)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과 설비에 대한 한국산과 일본산 주력 품목별 관세 혜택을 강화하거나, 관세 철폐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제적 효과 등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 일본의 자동차 부품 및 화학 소재 분야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중-일 각 지역별로 공동 R&D 센터 설립 및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인프라 측면에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활발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3) 석유와 LNG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동체 협력 제안은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협업 기회가 많아지고 수소 기술 및 CCUS² 분야 등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중국의 의료 및 금융 분야에서 개방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29일,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푸저우, 광저우, 선전, 하이난 등 총 9개 지역에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독자병원 영역확대 시범 사업 방안’을 중국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중국의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는 미국의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의 CEO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對中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논의 사항은 금융 시스템 개혁 심화 및 금융분야 제도 개방의 점진적 확대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2기의 향후 글로벌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새롭게 부각될 키워드: 신뢰(Trust) - 선택과 집중에서 벗어난 포괄적 밸런싱 전략 필요

2019년에 발간된 레이첼 보츠먼(옥스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저서인 ‘신뢰 이동(Who can you trust): 관계, 제도, 플랫폼을 넘어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요 국가와 주변국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와 논의가 지속될 최근 글로벌 이슈들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국가 간, 기업 간, 제도 간의 신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바라볼 그리고 경험할 각 국가별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는 ‘신뢰의 소멸’이 아닌, ‘신뢰의 이동’이라는 키워드와 담론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신뢰의 이동’은 글로벌 영향력의 이동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각 국가별 전략 변화와 맞물려 기존과는 다른 리스크와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Round 1과 Round 2 시기를 거치면서 내성을 키우고 나름의 준비를 한 중국과 글로벌 신뢰에서 큰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를 Round 3 하에서의 미국과의 사이에서 좀더 폭넓은 시야와 전략적인 태도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 포괄적 밸런싱(Balancing)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진행될 고객 세미나 강연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 예정)

※ Shin&Kim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센터 (GBSC, 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과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정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시장조사, 진출 전략수립, 규제 대응 등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한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GBSC)를 출범시켰습니다.

GBSC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외교·통상·산업계 출신 고문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미국/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법무법인(유) 세종의 해외 사무소 및 현지 제휴 로펌들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Shin&Kim 중국팀(China PG)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팀은 한중간 기업 인수합병, 합자법인 설립 및 운영 등 각종 중국투자, 다양한 특수산업 관련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각종 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한중간 국제분쟁해결 등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법률 수요에 대해서 최상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룹은 중국법에 정통한 한국 및 중국 변호사들이 유창한 한국어 및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양국 간 법률제도, 사업진행 방식 및 사업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서 고객의 사업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북경, 상해에 중국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김병국 전문위원 | T. 02-316-4353 | E. bkkim@shinkim.com |
| • 김재영 전문위원 | T. 02-316-4225 | E. jaykim@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 T. 86-10-8447-5343 | E. jjwon@shinkim.com |
| • 원상호 변호사 | T. 02-316-7961 | E. shweon@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